

개혁·실용 노선투쟁...정국 ‘승자 중심’ 대변혁 예고

‘호남대전’ 앞둔 민주 8·17 전당대회

2028년 총선 공천권 걸려 승부 향배 주목

정권 재창출·광주 반도체뺌 파장도 ‘촉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원대회가 권리 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과 수도권을 순회하는 막바지 슈퍼워크에 돌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전대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개혁과 실용 노선이 충돌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당의 시스템은 물론 전대 이후 정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승부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년 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차기 지도부는 광주공군항에 들어설 반도체 뺄 조기 완공은 물론 진보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닦는 역할까지 맡게 돼 이번 경선이 사실상 당의 명운이 걸린 승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총

청권을 비롯해 4개 권역을 돌며 치른 순회 경선 결과 당 대표 경선은 김민석 후보와 정경래 후보 간 표차가 3000여 표에 불과한 박빙 구도를 형성했다. 그 뒤를 송영길 후보가 추격하고 있다.

총청권은 김 후보가 이겨 기선을 잡았지만 부울경에선 정 후보가 승리했고, 인천·제주와 강원·대구·경북에선 김 후보가 근소한 차로 앞섰지만 총 누적득표율은 1.48%p(포인트)차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160만 명의 권리당원 가운데 50만 명이 집결한 호남의 승부가 이번 전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호남권합동연설회는 15일 오후 1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다. 이어 16일에는 서울·경기권 순회경

선이 치러지고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대에서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당원들이 참여한 지역별 경선 결과를 모두 합산해 당선자를 가린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두 후보 간의 지지를 표차가 크지 않다.

조원씨앤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간 지지를 차가 서울에서는 2.2%p(정 28.8%, 김 26.4%), 인천·경기에서는 11.6%p(정 35.1%, 김 23.5%)였다.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자체조사에서도 두 후보간 지지를 차는 서울에서 5.4%p(정 34.5%, 김 39.9%), 경기·인천에서는 5.2%p(정 40.3%, 김 45.5%)였다.

반면 호남 여론조사에서는 당 대표 후보들 간의 지지를 표차가 타 지역에 비해 큰 편이었다.

조원씨앤이가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전남·광주·전북 지지를 차가 16.6%p(정

29.50%, 김 46.1%)였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9.5%p(정 28.2%, 김 57.7%)였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가 ±2.2%p(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수도권과 호남 권리당원의 수가 엇비슷한 것을 고려하면 결국 호남의 표심을 확보하는 후보가 이번 당권경쟁을 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전대의 특징은 정 후보가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김 후보가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고, 송 후보는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 돌아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개혁과 실용 노선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 후보가 기존 지도부를 형성했던 당권 세력들을 대표하는 반면 김 후보와 송 후보는 당권파에 도전하는 세력이다. 매체들은 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을 친청(친정 청태) 계로, 김 후보나 송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을 친명(친이재명) 계로 분류한다.

계파적 분류보다 확연한 것은 노선 투쟁이다. 정 후보가 친청계가 더 강력한 개혁을 외치는 반면 김 후보와 송 후보는 개혁

보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변별된다.

지난 12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송 후보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1호가 ‘개혁’인데 정 후보가 지난번 토론에서 ‘내란청산’이라고 답한 것을 들어 “당대표가 국정과제 123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충격”고 비난했고, 정 후보는 “송태문이 국보 1호인데, 국보 1호만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국정과제 50호는 무엇인가”라고 반격했다.

세 후보들은 모두 발언에서도 정청태 후보는 더 강력한 개혁을 강조한 반면 김민석 후보는 유능한 집권여당을, 송영길 후보는 진짜 여당다운 여당을, 각각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 내 서로 다른 노선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맞붙은 이번 전대는 오는 17일 결과가 나온 이후에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두 집단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번 전대는 이 대통령 집권 2년차를 맞는 여당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선거여서

당안팎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반의 개혁 동력이 점차 약화하면서 고공행진하던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상당부분 조정되면서 새로운 추동력이 요구되고 있고, 내란청산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일부 불가피했던 여야 간 대결구도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 정권의 첫발인 호남의 입장에서 이번 전대의 결과가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

전대 결과가 흐트러지면 어렵사리 일궈놓은 원내 제1당의 지위가 진보세력 우위가 2년 뒤 총선에서 빛을 잃고 이후 차기 정권 재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대통령의 지원으로 확정된 광주공군항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도 힘을 잃게 돼 경제적 소외의 틀을 벗어날 전제일 우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정국 구도나 형세를 보면 사실상 지금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호남이 현명한 지혜를 모아 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해야 할 때가 왔다”며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 나라를 일으켜 세운 저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 “이진숙, 5·18 편협단체와 국회서 포럼 열어...제명해야”

국회서 국민의힘 규탄대회

“국회를 편협 장으로 전락”

의장에 윤리특위 구성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것을 규탄하며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민생입법 방해 및 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자리에서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편협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전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추위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은 물론이고 행사에 참석하는 이영훈, 김용삼, 주동식 같은 사람들도 학술 연구라는 거창한 이름에 기대어 5·18을 근본부터 편협한 장본인”이라며 “5·18은 복잡한 애기가 아니다. 군사독재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우리 부모님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쓰러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생입법 방해·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나간 사건”이라며 “진보 보수를 떠나 일말의 인간성이라도 있다면 5·18을 편협하고 장난치면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이제라도 행사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만약 행사를 강행한다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의원은 합리적으로 개조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과거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 의원을 당장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달라”며 “윤리특위를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신속히 구성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자정 기능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바린다”고 요청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출신인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황 관장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번 행사 개최를 묵인했는지 반드시 따져 물겠다”며 “아울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장 대관 규정을 더 엄격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18 정신을 편협하고 비하하는 그 어떠한 세력파도 타협할 수 없다”며 “이들이 국회에 발발할 수 없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 몽니로 민생입법조차 가로막는 구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직무 유기로 국가의 미래와 민생이 더 이상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산적인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동북댐 ‘가뭄 주의’...광주특별시장 “물 절약 동참을”

상수도사업본부, 안정적 수도물 공급 선제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광주권역 주요 상수원인 동북댐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생활 속 물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13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동북댐 유역 누적 강수량은 548.5mm로 전년 대비 42% 수준이다.

동북댐 저수율은 48.94%로, 가뭄 대응 ‘주의’ 단계다.

현재 저수율은 약 150일간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해 운영정수장과 덕남정수장의 생산량을 조정하고, 상수원 및 정

수장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또 가뭄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뭄 단계별 대응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계별 필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도 홍보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절약 방법으로 양치컵 사용하기, 수도꼭지 유량 조절하기,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사용하기, 절수형 샤워헤드 사용하기, 빨래 모아서 하기, 설거지통 이용하기 등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신정훈 ‘지방의회법’ 제정안 발의...의회 독립성·역량 강화

체계적 의정활동 수행 위한 총 11개 장 89개 조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겨우 1개 장 (제5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예산·의정활동지원 등에 관한 자율

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방분권의 확대와 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안이다.

총 11개 장 89개 조항으로 자치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무, 조직구성, 의원의 신분과 활동 및 이해충돌 방지, 의회의 권한, 위원회와 교섭단체, 회의,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질서와 징계,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등 지방의회의 체계적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 의원의 이날 회견에는 강득구, 김문수, 이광희, 이혜식, 황명선 의원이 함께했다.

신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서왕진, 혁신당 시당위원장 도전

2028 총선서 민주와 경쟁 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영광 출신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대표·사진)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위원장에 도전한다.

서 의원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회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장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그는 “호남 정치의 새로운 도약과 대안정당으로서의 쓸모를 입증하겠다”며 2년 앞으로 다가온 2028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도 예고했다.

서 의원은 “호남에 거대한 기회를 주어 했지만 막강한 행정·재정 권한을 가진 특별시가 관료주의와 행정편의만 좇는다면 호남의 미래는 담고 만다”며 “혁신당은 행정의 그림자가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꽃핀대 대안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호남이 아니라 혁신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바퀴로 달리는 호남을 만들겠다”며 “경쟁적 연대와 협력적 경쟁을 통해 혁신당의 쓸모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촘촘저한 자강을 통한 협력 정치 △지역 간 격차 완화·기후위기 대응·반도체 메가특구 등 3대 특별위원회 구성과 정책협의체 운영 △풀뿌리 생활정치 거점 구축 등을 제시했다. 호남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호남권 민생위기 공동 대응위원회’ 구성을 민행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민주당 시장위원장에 공식 제안했다.

서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보다 앞서갈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과 소형모듈원자로 (SMR) 추진 문제, 기후환경 정책까지 더 놓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2028년 총선을 겨냥해 특별시당을 풀뿌리 생활정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놔다.

그는 “스웨덴의 ‘민중의 집’처럼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의 장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이 정치의 효용성을 체감하고 지역이 살아나는 든든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위원장 선거는 20일부터 22일까지 주권당원 대상 온라인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15일부터 22일까지 가능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